

# 건설부, 91업무계획

## — 200만호 건설목표 앞당겨 연내달성 —

건설부는 고속도로·국도를 가릴것없이 각종도로가 급증하는 차량증가를 수용치못해 체증현상이 극심함에 따라 고속도로 256km·국도 790km등 교통애로구간 1천46km를 오는 93년말까지 해소키로하고 올해는 총1조원을 집중투입, 모두 9개구간의 고속도로 신설및 확장과 국도·신도시가로망 74개구간 건설공사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분당·일산등 신도시아파트 8만7천300호등을 한햇동안 총 61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그동안 추진해온 200만호주택건설목표를 올해안으로 조기달성키로 했다.

이상희건설부장관은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을 포함 △도로망의 획기적 확충 △맑은 물 공급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주택공급 확대 △지역균형개발시책 추진 △건설행정의 합리화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상관은 우선 도로로서의 기능을 아예 상실하고 주차장화되고 말았다는 혹평마저 듣고있는 도로교통애로구간의 조기해소를 위해 세계잉여금·차관도입·도공사채·민자유치등으로 총3조8천억원을 오는 93년말까지 투입, 1천46km에 이르는 구간의 교통애로를 해소키로하고 이를위해 올해는 약1조원을 추가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한남~양재·냉정~구포 등 5개확장

구간및 제2경인·판교~안양등 4개신설구간에대한 고속도로건설사업을 비롯 △행주~능곡등 9개구간 국도건설(반월~군포등 53개구간 92~93년중 완공) △신도시가로망 12개구간공사(26km) 등을 올해 역점추진, 공기를 1~2년 단축할 예정이며 내년까지 전국의 기존국도 및 지방도는 100%포장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건설부는 올해도 주택건설의 원활화를 위해 주택 1천640만평을 개발공급하는 한편 도시지역의 택지부족난 타개를 위해 일부자투리 땅의 활용과 도심지 주·상복합건물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또 자재및 기능인력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해 지난해 2만2천호를 건설했던 조립식주택을 올해는 5만호로 늘리기로 하고 이를위해 민간건설업체들의 수도권지역 PC공장건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관련자금도 융자해주기로 했다.

신도시건설과 관련, 건설부는 전철(분당~수서·사당~금정·일산~구파발간등), 도로, 상하수도, 학교시설 등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게끔 관련 도시기반시설공사도 착실히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최근들어 건설업계의 최대현안으로 인식되고 있는 건자재및 건설인력난에 대해서도 지난

해 허가된 대량의 건축물량이 올해 본격 착수됨에 따라 관련대책을 관계부처공동으로 강구하였으며 자재중에서도 다소 불안한 실정인 골재의 경우는 초평도등 새로운 하천골재개발등으로 지난해보다 15%늘어난 648만<sup>m</sup>를 적기 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또 맑은 물 공급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중장기(91~2001 물수급대책을 토대로 수계별로 각종사업들을 추진키로 했다.

이중 다목적댐의 경우 주암·임하댐은 올해중에, 강남댐은 오는 95년까지 각각 준공하는 한편 용담·부안·횡성·밀양등 4개댐은 올해 착공해 97년 말까지 준공케 된다.

또 오는 2천1년까지 선진국수준의 맑은 물 공급을 목표로 14개 광역상수도시설및 157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수처리장건설업무 환경처로 이관계획)키로 했다.

한편 건설부는 서해안지역·전주권등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키로 하고 올해는 국고 7천41억원(90년대비 24.1%증가)을 들여 다도해·태백산·제주도·88고속도로주변등 4개특정지역, 전주권 2단계, 서해안개발사업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밖에도 2천1년까지 총3억7천여만평의 각종용도별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위해 지난해 12월 수립했던 중장기해안매립계획에 따라 각종 해안매립공사를 시행키로하고 올해는 이가운데 가장 경제성이 높은 2천200만평에 대한 매립공사에 신규착수할 계획이다.

건설부의 올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 △ 주택공급확대로 주거안전도모

가. 200만호주택건설의 조기달성

- '83~'87 5년간 120만호 주택건설로 '80년대 말 주택난을 심화시켰으나 지난 2년간 121만호가 건설되어 주거안전에 기여하고 200만호 주택건설도

'91년안에 달성전망. 완료기준으로 보아도 '92년말 까지 221만호가 건설될 것이며, 금년중에는 61만호가 완공.

### —주택건설원활화 대책

○'91년중 택지 1,640만평을 개발공급하는 한편, 도시지역의 택지부족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의 미활용 택지(자투리땅등)를 적극 활용추진, 도심지 주·상복합건물 건설 촉진.

○소요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 및 민영주택자금 4조4,000억원을 적기에 공급

○자재 및 기능인력 수급난 해소와 공기단축을 위하여 조립식 주택공급을 확대

·주립식주택 건축확대 : 22,000호(90)⇒50,000호('91)

·수도권내 PC공장입지규제 완화

·PC공장 설치시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나. 실수요자위주의 주택공급체계 확립

—실수요자위주의 소형주택건설 확대

○공공부문(주공 및 지자체)은 18평 이하의 소형주택건설에 주력

○민간부문도 소형주택건설 확대

·현행 60%인 국민주택규모 건설 의무비율을 70%로 제고

—장기무주택자의 입주자격우선 부여

—주택가격안정과 투기억제를 위하여 실수요자위의 공급체계확립

○주택전산화추진으로 2주택이상 소유자, 위장무주택자등 무자격 당첨자 색출

·1단계('91.3말까지) : 6대도시 및 경기도

·2단계('91.4이후) : 전국

다. 신도시건설의 차질없는 추진

—'91년중 87,300호를 공급하여 수도권지역의 주택수급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고 주택가격안정을 도모(91년 : 87,300호)

-신도시 입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의 차질없는 설치추진

○전철 : 분당~수서, 사당~금정, 일산~구과발 3개노선 기착공

○도로 : 분당~수서·자유로 등 7개 노선은 기착공, 일산~수색 등 11개노선은 착공준비중

○상하수도 : 분당 일산 평촌 산본 4개신도시는 기착공, 중동은 착공준비중

○학교 : 국민학교와 중학교용지는 무상으로, 고등학교용지는 조성원가로 제공하고 소요예산을 확보(교육부)

-특히 '91.9 초기 입주(분당시범 단지 2,500세대)에 대비하여 교통, 상하수도, 학교, 필수공공기관 등 기반시설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민·관합동 대책반을 운용

-신도시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의 공공기관을 유치

○유치대상기관은 수도권정비대책과의 조화문제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

라. 전자재 및 인력의 안정적공급

-'90년에 허가된 대량의 건축물량이 금년에 본격착수되어 자재 및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수급상태와 경기동향을 수시점검하여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대책 강구

-자재부문에 있어서는 시멘트, 철근등은 생산설비확장등으로 큰 문제가 없으나, 골재의 수급전망은 다소 불안한 실정이므로 '90대비 15%가 증가한 6,483만<sup>m</sup>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책 강구

○양질의 해사공급을 위한 세척용수 공급확대 및 하역능력 확대

○초평도(채취가능량 860만<sup>m</sup>) 등 새로운 하천골재원 개발

○석산등 골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골재채취촉진법(가칭)제정추진

○체계적인 골재개발추진을 위한 골재채취전담회사 설립

○권역별 부존량 조사를 실시하여 중·장기 골재 수급계획 수립

-기능인력난 완화대책

○공공직업훈련과 기업내 인력양성등을 통하여 기능인력공급을 17천명('90)에서 30천명('91) 수준으로 확대

○노동부 및 건설협회의 취업정보센터를 통하여 유희인력을 적극 흡수

○건축물량이 집중되는 신도시건설의 인력수급에 우선대처키위해 상반기중 분당지구에 '합동기능공양성소'건립

### △ 맑은물공급과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관리

가. 중장기 물공급계획의 수립

-늘어나는 용수수요를 충족시키고 홍수피해를 줄이는 한편, 5대강 유역별 수자원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계별 중장기 물수급계획을 수립('90.12)

-이를 토대로 지역별, 용도별 용수공급계획을 수립

나. 다목적댐 건설

-현재 건설중인 3개다목적댐중 주암댐과 임하댐에 '91년내에 준공(주암댐 및 임하댐의 준공으로 10억톤의 수자원 확보)하고 남강댐보강사업은 95년도에 준공할 계획이며 용담, 부안, 횡성, 밀양댐은 91년에 착공하여 97년까지 준공추진

다. 맑은물의 공급확대

-2001년까지 급수의 질과 양을 선진국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 광역상수도시설을 확충

○섬진강과 금호강계통은 '92까지(43.5만톤/일), 수도권Ⅳ단계와 주암댐계통은 '93까지(190만톤/일)완공 추진

○2001년까지 14개 광역상수도의 신설 또는 확장  
·신설(9) : 임진강, 횡성댐, 충주댐, 보령댐, 용담댐, 부안댐, 밀양댐, 목포권, 포항권

·확장(5) : 수도권(V), 대청(Ⅱ), 주암(Ⅱ), 낙

동강(Ⅱ), 남강(Ⅱ)

-하수처리장 건설확대

○건설중인 48개사업은 '96까지 완공하고 2001년까지 109개소 추진건설

·공업도시(3) : 울산, 온산, 창원·마산

·일반도시(45) : 청주, 제주, 수원등('91착공 : 전주, 부천, 공주등 7개 도시)

※ 하수처리장 건설업무는 부처간 기능조정에서 따라 환경처로 이관할 계획임

라. 5대강 치수사업과 홍수통제관리체계 구축

- '91년에 낙동강, 금강, 섬진강, 영산강등 4대강 수계치수사업에 660억원을 투자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에 589억원을 투자하여 홍수피해를 예방(한강수계치수사업은 91년에 기본계획수립 : 조사비 4억원)

- 과학적이고 신속한 방재를 위하여 5대강 홍수통제체계 구축

○한강, 낙동강, 섬강, 섬진강수계(기설치·운영중)

○영산강수계('91.6설치)

- 굴포천의 근원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방수로공사 9월착공(타당성조사중인 경인운하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굴포천 방수로와의 연계 개발 방안 및 사업비 분담등 대책강구)

△ 도시공간의 합리적 활용

가. 도시계획 및 개발체제의 정비

- 도시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제의 실시등 여건변화에 대비하여 도시계획 및 개발체제의 재정립 필요

○대도시와 주변지역을 광역도시권으로 설정하여 도시간 연결도로, 쓰레기 및 하수처리장, 종합운동장 등의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이용토록 하는 광역계획 및 개발체제 구축

○도시공간의 입체적계획과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배치,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대지의 크기,

지하공간의 이용범위등을 정하는 지구상세계획제도 도입

○주택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등 다원화등 도시개발체제를 정비, 체계화하고 도시개발에의 민간참여 확대

- 도시계획법 개정 및 도시개발법 제정 추진

나. 건축행정제도의 개선

- 도심지의 토지이용 고도화 촉진

○주거·상업용 복합건축물의 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이에 부가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일조권 제한의 완화

○둘이상의 자투리땅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건폐율, 용적률등의 인센티브 부여

- 조례우임의 확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건축유도

- 건축법 개정 추진

△ 지역균형개발시책의 추진과 제도개선

가. 집중개발 필요지역에 대한 투자확대 : 특정지역, 전주권 및 서해안개발사업에 국고 7,041억원('90대비 24.1%증) 투자

나. 수도권 집중억제시책의 지속추진 : 물리적 규제에 의한 수도권 집중억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제적 규제방식을 추가로 도입하고, 수도권기능의 지방이전도 병행추진

- '95년까지 11개칭의 대전이전계획과 병행하여 지역균형발전기획단에서 건의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관련 공공 및 유관기관의 이전

○지방교육 및 금융의 육성

○수도권과 기타지역간의 토지이용 규제의 차등화

-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시 과밀부담금 부과

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 도 및 군단위의 지역계획에 사회간접시설등의

배치와 투자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여 실천력있는 계획으로 발전

-지역개발재원의 확충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재원을 지역개발에 확대 투자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활용

○각종 지역개발사업에의 민자유치 활성화

-지역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의 개발지원단 설치

-인구, 지역생산, 소득, 도로, 상하수도, 교육, 문화시설 등 지역개발에 관한 통계를 정비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별로 규제와 지원을 차등화

-’91년중 지역균형개발법 제정 추진

### △ 건설행정의 합리화

가. 도시계획에 관한 중앙기능과 지방기능의 재조정

-건설부는 장기적인 도시발전방향을 제기하는 도시기본계획(20년)과 국가사업 또는 2이상의 도시에 걸치는 광역적 도시계획업무만 관장하고 구체적인 단위도시계획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능력을 보장함으로써 지방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발전 도모

나. 토지이용제도의 개선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89~’90에 걸쳐 용도지역내의 행위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3만평미만의 용도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31건의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였으나 아직까지도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편익을 주는 요인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용도지구구분을 축소조정하고 수개의 법률에 의한 중복규제를 단일규제로 일원화하며 탄력적인 행위 제한이 되도록 용도변경 권한의 지방위임 확대

다. 토지보상제도의 개선

-보상기준의 미흡한 영업권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세민에 대한 생활보상수준을 개선토록 하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설 운영(’91.1)하여 토지보상기간을 최대한 단축

### △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의 수립

가. 기본목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의 적극유도

○지방중소도시의 육성등 지방발전의 촉진

○수도권 집중의 지속적 억제와 기능의 지방분산 적극유도

-생산적이고 개방화된 국토기반의 조성

○중서·서남부 신산업지대의 조성

○국내외 간선교통망과 첨단정보망 구축

○생산현장과 연구·육성·정보기능의 종합체제 구축

-국민기본수요의 충족과 쾌적한 환경의 조성

○주택, 상하수도 및 여가시설의 확충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환경관리체제 구축

-통일에 대비한 국토공간의 일체성 회복

○도로, 철도등 단절된 교통망의 복원

○접경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및 남북교류공간 조성

다. 추진계획

-상반기중 계획안작성및 관계기관협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수렴

-하반기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